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전병주*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Current Status of Welfare Foundation in Local Governments and its Activation

Byeong-Joo Jeon *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2013년 12월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한 복지재단은 20개이다.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복지재단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강화로 인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복지재단의 설립이 증가할 것이므로 복지재단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복지재단에 대한 운영 실태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이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설립된 복지재단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일부 재단에서 대두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복지재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복지재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 핵심인재, 독립성, 정보화

Abstract The number of welfare foundation to which local governments have contributed is 20 as of December, 2013. A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ends to be more stressed than that of central government to achieve the fulfillment of local residents' welfare,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foundation by local governments is increasing. Considering that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foundation will increase in future due to the reinforcement of local autonomy it is evident to study the means to operate welfare foundations transparently and effectively. In this situation there has been neither review on the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welfare foundations until now nor study suggesting its improvement direction or activation plan. Therefore, this study delves into the current status of nation-wide welfare foundations and several problems occurred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it is aimed to achieve the original goal of welfare foundations and the activation of welfare foundations.

Key Words : Local Government, Welfare Foundation, Top Talent, Independence, Informatization

Received 1 January 2014, Revised 3 February 2014

Accepted 20 February 2014

Corresponding Author: Byeong-Joo Jeon(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okjbj@cbn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한국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한 복지재단’(이하에서는 ‘복지재단’이라고 함)은 2004년 서울 동작구의 ‘동작복지재단’이 처음 설립되었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18개의 복지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서울 강서구와 대전 유성구는 복지재단 설립 조례가 통과되어 출범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1] 복지재단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1월에는 화성복지재단과 증평복지재단 등이 중심이 되어 ‘전국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협의회’가 창립되어 전국의 복지재단들이 가진 지식, 기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회원의 권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재단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지역의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지만, 최근에 일부 복지재단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서 복지재단에 대한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국의 복지재단 중에서 초기에 설립되었던 복지재단은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광역자치단체의 점검을 받아 위탁시설 운영과 이사회 운영 등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몇 개의 복지재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행정감사에서 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복지재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관리 내지 의회의 행정감사를 받거나, 예산 사용을 공표하는 등의 제한적인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나, 복지재단이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감독에는 한계가 있으며, 심지어 재단의 독립적 성격을 이유로 지방의회의 행정감사 조차도 거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현재 전국에는 20여개의 복지재단이 설립되었거나 설립 조례가 통과되었으며, 특히 2012년 이후에 전국에서 6개 재단이 설립되었거나, 준비 중임에도 이러한 재단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강화로 인하여 앞으로 이러한 복지재단의 설립이 증가할 것이므로 복지

재단을 관리하거나 보다 효율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복지재단에 대한 운영 실태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이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설립된 복지재단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일부 재단에서 대두된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그에 따른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복지재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보다 활성화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2. 복지재단의 현황 및 문제점

2.1 복지재단 현황

복지재단은 각 지역의 조례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전국에 복지재단은 2004년 7월 동작복지재단이 설립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역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복지재단이 설립되었거나, 설립 조례가 통과된 지역은 서울권(동작, 양천, 구로 희망, 노원 교육, 강서)과 충청권(증평, 서산, 청주, 당진, 유성)이 5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권 4개(시흥 1%, 평택, 화성, 김포), 전라권 3개(광양 사랑나눔, 목포, 신안), 경상권 2개(달성, 거제), 강원권 1개(태백)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복지재단은 시 지역에 18개가 설립되었으며, 군 지역은 2개(증평, 신안)가 설립되었다. 이외에도 춘천, 여수 등에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도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복지재단 설립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복지재단에 대하여 조직의 예산, 인력 및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의 복지재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된다. 복지재단의 출연금은 동작·양천사랑·증평·목포복지재단 등이 20억원 이었고, 청주시의 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작복지재단은 20억원으로 출범하여 현재는 35억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재단에 근무하는 인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재단에 근무하는 인원은 대체적으로 5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 설립된

청주복지재단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전국의 복지재단 중에서 동작·평택·김포 등의 9개 복지재단은 관내의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등을 수탁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구로희망·화성·청주·목포 등의 복지재단은 수익사업이나 수탁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urrent status of welfare foundation

| No. | Region | Name | Foundation day | Staff | Consignment business |
|-----|-------------|---------------------------|-----------------------|-------|----------------------|
| 1 | Seoul | Dongjak | 2004. 7. | 8 | o |
| 2 | | Yangcheon | 2005. 12. | 5 | o |
| 3 | | Guro Hope | 2009. 3. | 4 | x |
| 4 | | Nowon Education | 2011. 10. | 6 | o |
| 5 | | Gangseo | regulations enactment | - | - |
| 6 | Kyeonggi | Siheung 1% | 2005. 12. | 5 | x |
| 7 | | Pyeongtaek | 2008. 12. | 8 | o |
| 8 | | Hwaseong | 2009. 12. | 7 | x |
| 9 | | Gimpo | 2012. 3. | 8 | o |
| 10 | Gangwon | Taebaek | 2010. 3. | 1 | o |
| 11 | Chungcheong | Jeungpyeng | 2009. 5. | 4 | o |
| 12 | | Seosan | 2011. 12. | 8 | o |
| 13 | | Cheongjoo | 2012. 7. | 15 | x |
| 14 | | Dangjin | 2012. 9. | 5 | o |
| 15 | | Yuseong | regulations enactment | - | - |
| 16 | Jeolla | Sharing Love of Gwangyang | 2008. 4. | 5 | o |
| 17 | | Mokpo | 2008. 6. | 7 | x |
| 18 | | 1004 Islands Shinan | 2008. 6. | 4 | x |
| 19 | Gyeong-sang | Dalseong | 2008. 10. | 4 | o |
| 20 | | Geoje | 2012. 7. | 4 | x |

2.2 복지재단 문제점

복지재단은 지역복지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조직관리의 차원 구분에는 연구에 따라 다양한 요인이 나타나지만, 공공정책이나 재정 변화 등의 외부환경 요인과 관리자의 리더십과 인사관리 등의 조직내부 요인으로 크게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2]. 특히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재단의 탄력적인 예산 운용 및 사업 집행, 핵심인재의 채용을 통한 업무집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익기금이나 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서도 인력 및 회계 운영의 불투명성, 일관성 없는 사업 진행, 재단 운영에 대한 명확한 지침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3]. 현재 일부 복지재단에서 예산 집행과 인력 채용 등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과 무관한 사업집행으로 본래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실제로 각 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

2.2.1 예산 및 인력부문

복지재단은 기초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지재단을 설립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모두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중평균과 거제시가 각각 20억원, 22억원을 복지재단에 출연금으로 지원했으나, 비슷한 수준의 재정여건을 가진 A 지역의 복지재단에서는 10억원을 출연하였다. 또한, 복지재단은 기초자치단체의 출연금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의 예산 운용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 및 의회의 행정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자의적인 예산집행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B복지재단은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단체의 창립총회 홍보비 예산을 부당 지급하거나,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부분에 용역비를 임의로 지출하였다. 또한 사무용품을 과다 구입한 뒤 문제가 되자 지출결의서 날짜를 허위 기재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복지재단의 이사장은 모두 비상근 형태이지만, 대학교수, 사회복지단체장은 물론 종교인, 사업가, 정치인 등이 선임되어 있어서 일부 이사장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다소 문제가 되었고, 자신의 정치적 홍보창구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기관의 대표는 전공분야의 지식만큼 중요한 것이 리더로서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성 내지는 포괄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면 조직관리 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조직구성원들과의 신뢰 형성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 설립된 C복지재단은 재단의 실무 책임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특정인에게 다소 유리하게 채용과정이

1) 문제가 발생한 복지재단을 직접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단순 이니셜로 표기하였다.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 지역 의회의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D복지재단은 재단과 갈등이 있는 위탁 시설의 직원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재단 이사장의 지인이 채용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E복지재단은 실무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지역인사의 가족을 채용하면서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 복지재단은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하여 인력을 선발했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투명하지 못한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복지재단과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다. 더욱이 지역 인사 내지 심지어 복지재단의 관계인을 채용하기 위해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공고를 한다는 것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복지기관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2.2.2 사업 및 관리부문

일부 지역의 복지재단은 소속 직원이 몇 명에 불과하지만, 관내의 복지관 등의 시설을 수탁운영하며 관리하고 있어서 복지재단 설립목적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F복지재단은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이 1명에 불과하여 재단의 역할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단지 관내의 장애인 복지관 등을 수탁운영하고 있는 차원이다. G복지재단은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하는 시설을 위탁 운영해야 하지만,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시정을 요구받았다. 또한, H복지재단과 해당 이사장은 지역의 재개발사업 관여 의혹, 주민의 개인정보 유출, 법안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사회회의의 중요 안건을 수차례 회의 없이 서면으로 의결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심지어 I복지재단의 이사장은 해당 지역 정치인이 복지재단에 대한 비판을 하는 등의 이유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공식석상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J복지재단은 설립과정에서 지역에서의 불협화음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관내의 복지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은 운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복지재단의 위상에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더욱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매년 복지재단에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재단의 활동을 지도·감독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는 업무 소홀이고,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문제에 대하여 해당 복지재단은 나름대로의 이유와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문제로 인하여 지역에서 갈등 내지 혼란이 발생한 만큼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복지재단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반사항의 검토가 요구된다.

3. 복지재단의 활성화 방안

지금까지 복지재단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주로 재단 운영에서의 예산, 인력 및 사업부문과 관련된 것이므로 일련의 사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전국의 복지재단은 현재까지 발생한 문제점 내지 지역 내 갈등으로 인해 복지재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업무를 집행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복지재단의 예산 및 인력운용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재단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복지와 관련한 구성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1 예산 및 인력

전국의 복지재단은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정 지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내지는 그 단체장의 영향을 받아 복지재단 운영의 독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복지재단이 수익사업이나 관내 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역 복지관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재정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모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단의 이사로 선임하여 재단의 활동과 역량을 감시하는 시민 배심원 구실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복지 실현을 위해 민간의 역할을 제도권에 포함시켜 기초자치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복지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복지재단의 예산 반영을 좌우되므로 복지재단, 지역 주민, 기초자치단체와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재단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단체장의 입장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재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이 복지재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으므로 단체장의 임의적인 영향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복지재단의 인력과 관련하여, 정치적 입김이 작용해 재단 이사장이나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로 구성되면 그야말로 예산을 낭비하는 무용지물 조직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환경의 불확실성과 조직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인재(top talent)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4]. 핵심인재의 관리에 대하여 내부 노동시장에 초점을 두어 조직 내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육성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노동시장에 초점을 두어 핵심인재의 확보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는 지역여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5]. 그러나, 지역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조직 내지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핵심인재의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므로 인력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재단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평택복지재단은 사회복지 관련 공공·민간·학계 전문가 25명을 조사연구위원으로 위촉하였다²⁾. 이와 같이 국책연구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재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단은 전문 인력을 상시 채용하기보다는 사업성과 정책 방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복지재단의 이사장과 실무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에 업무의 전문성과 함께 리더십 등을 검증하며,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재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 재가는 사회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특권을 인정받는 것인데 이는 공식적 비공식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6]. 각 기초자치단체장의 측근 내지는 전직 공무원이 복지재단의 이사장

및 실무책임자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단체장과 이해관계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단을 운용하거나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복지재단의 이사장은 자신의 임명권을 가진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립적 법인이라 하더라도 에스맨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복지재단의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이러한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신뢰받는 리더십은 영감적 동기와 지적 자극을 통해 구성원들의 직무열의를 증가시켜 조직 업무수행에 더 큰 기여를 하게 됨을 인식해야 한다[3].

다음으로, 재단의 실무자를 채용함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관리자가 복지재단의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면접관으로 참여하고, 다른 전형절차 없이 면접만으로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지역에서의 불신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여러 관계자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채용기준을 제시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그 특정인이 합격됨으로써 지역 갈등을 유발하여 복지재단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의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측근 내지 친인척, 지역 유력인사의 가족, 복지재단의 관계자 등의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채용절차는 근절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타당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전남복지재단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했으며, 직종·직급별로 출제 과목과 시험 시간을 달리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직원 채용의 객관성을 담보하였다.

3.2 사업영역

복지재단은 기초자치단체의 공식 행정체계 내에서 수행하기 힘들거나 업무 수행이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지역에서의 실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각 지역의 복지재단은 지역 주민에게 보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조성이나, 지역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비영리조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독립재단

2) 위촉된 조사연구위원들은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연구’와 ‘공공 일자리 가이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그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 인권의 실태 및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공공 일자리 현황 및 동향을 정리할 예정이다.

(independent foundation)이나 지역사회재단(community foundation)과 달리 외부에 지원금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대한 관심이 타 재단에 비해 낮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7].

첫째, 각 지역의 복지재단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복지시설 중 사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교육’은 대부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택복지재단은 ‘지역사회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기 위한 인문학 강좌’와 관련해 자활 사업 참여자들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함으로써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도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타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별화된 사업을 시도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둘째, 각 기초자치단체와 복지재단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최근에 시행된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민후견인 양성과정’에 대하여[8] 기초자치단체와 복지재단이 함께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업 진행 형태는 시민의 참여를 제고하여 시민의 호응과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복지재단 활동의 공정성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의 복지재단은 재정과 인력부문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수의 사업영역에서 업무를 추진하기보다는 지역 특성과 재단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부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복지재단 중에서 정책연구팀을 운영하는 곳이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이 재단에서도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가 근무하는 경우는 2~3명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인력은 그들의 연구를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실질적인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를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복지재단의 정책연구원들은 본연의 업무 이외를 담당하면서 점차 의욕을 잃어 업무에 대한 침체기를 거쳐 좌절과 무관심의 단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복지재단의 연구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전문성을 갖춘 연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역적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성과를 제고하든지, 아니면 연구부문을 정부출연연구원에 위탁하거나 지역의

전문 인력을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3].

그나마 복지재단의 출범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여 정책 개발을 주력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복지재단이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이 복지재단의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적합 직종 연구’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 등의 연구결과물이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이러한 국제 학술대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복지재단이 도전한다는 자체만으로 매우 고무적이며, 우수한 성과물을 통한 호평을 받음으로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복지재단의 연구 성과를 주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3.3 기타

복지재단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복지재단의 효율을 더 높이고 지역 주민의 호응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의 연구 성과 및 사업 내용, 운영실태 등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각 복지재단의 재정 및 사업현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도록 복지재단 홈페이지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 언론에 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재단 상호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서 신설 복지재단의 안정성 확보와 재단간의 상호협력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서비스 공급자 및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전략 및 세부지침을 정보화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9]. 이러한 과정은 기초자치단체의 복지행정업무 효율을 도모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에게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복지재단에 대한

3)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의 경우에도 서울복지재단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정책연구팀을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재단에서 연구팀을 구성하고자 채용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규모 및 전문성 면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그에 따른 복지재단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의 활성화를 처음으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복지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첫째, 예산부문에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모아 복지재단의 재정적 독립을 도모하거나, 지역주민의 지지를 전제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인력부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이사장과 실무책임자를 선임함에 있어서 전문성과 함께 리더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둘째, 복지재단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과 재단의 여건을 고려하여 특정 부문에 집중하면서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지재단의 연구 성과, 사업 내용 및 운영실태 등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호응과 신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 복지재단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일부 복지재단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의해 소명감을 갖고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복지재단과 그 구성원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들이 갖고 있는 순수성과 전문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재단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구성원의 역량이 강화되어 그들의 소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환영 받는 복지재단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REFERENCES

[1] J. W. Lee & S. W. Park, A Study of the Process of Social Welfare Policy-making in a Local Government form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44, pp. 153-180, 2013.

[2] Y. S. Kang & J. A. Cho, Exploring the Critical Management Factors and Organizational Growth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in Seoul. *Journal of Seoul Institute*, Vol. 9, No. 1, pp. 107-130. 2008.

[3] J. H. Lee, A Study on the pattern and activating method of non-profit corporation. *The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Vol. 22, pp. 61-

84, 2007.

[4] O. W. Park, Top Talent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Daehan journal of business*, Vol. 26, No. 2, pp. 389-409. 2013.

[5] J. Boudreau & P. M. Ramstad, Talentship, talent segmentation, and sustainability,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 44, No. 2, pp. 129-136, 2005.

[6] S. Y. Kim, An Exploratory Study on Perception to Specialization and Job Characteristic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Focused on Managers in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Vol. 20, No. 2, pp. 1-19, 2010.

[7] C. H. Lee, & K. H. Kang & C. G. H, The Effect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on Work Engagement: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21, No. 1, pp. 147-169, 2013.

[8] B. J. Jeon, A Study on Activation of Citizen Guardians in Aging Society.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4, pp. 1-10, 2013.

[9] Y. J. Ham, The Effects of Informatization on the Social Welfare Sector.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8, pp. 11-21, 2013.

전 병 주(Jeon, Byeong Joo)



· 2002년 8월 : 동국대학교 법학과(법학사)
 · 2009년 8월 : 충북대학교 법학과(법학석사)
 · 2014년 2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문학박사)
 관심분야 : 사회보장, 노인·주거복지
 · E-Mail : okbj@cbnu.ac.kr